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09.(월) 11:00 (지면) 2026. 11. 10.(화) 조간 배포 2026. 11. 09.(월) 06:00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개소 선정… 사업 구조도 개편한다

- 어촌경제 거점 조성 및 생활 서비스·안전 기반을 개선할 40개소 선정
- 사업구조를 4개 유형으로 개편하고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의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①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개소가 신청했다. 이후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0개소(어촌경제도약형 5개소,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

* 삼척역에서 삼척항을 보행형 해양문화 테마 축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 사업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하고,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② 사업구조 개편 및 내실화 : 조성에서 운영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어촌뉴딜 3.0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그동안 어촌·어항 재생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치중해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 여건에 맞게 사업구조를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개편*하고,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기존)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 (개편)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Ⅰ,Ⅱ) 어촌안전형

먼저 사업구조를 4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단,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조성된 시설물이 어촌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아울러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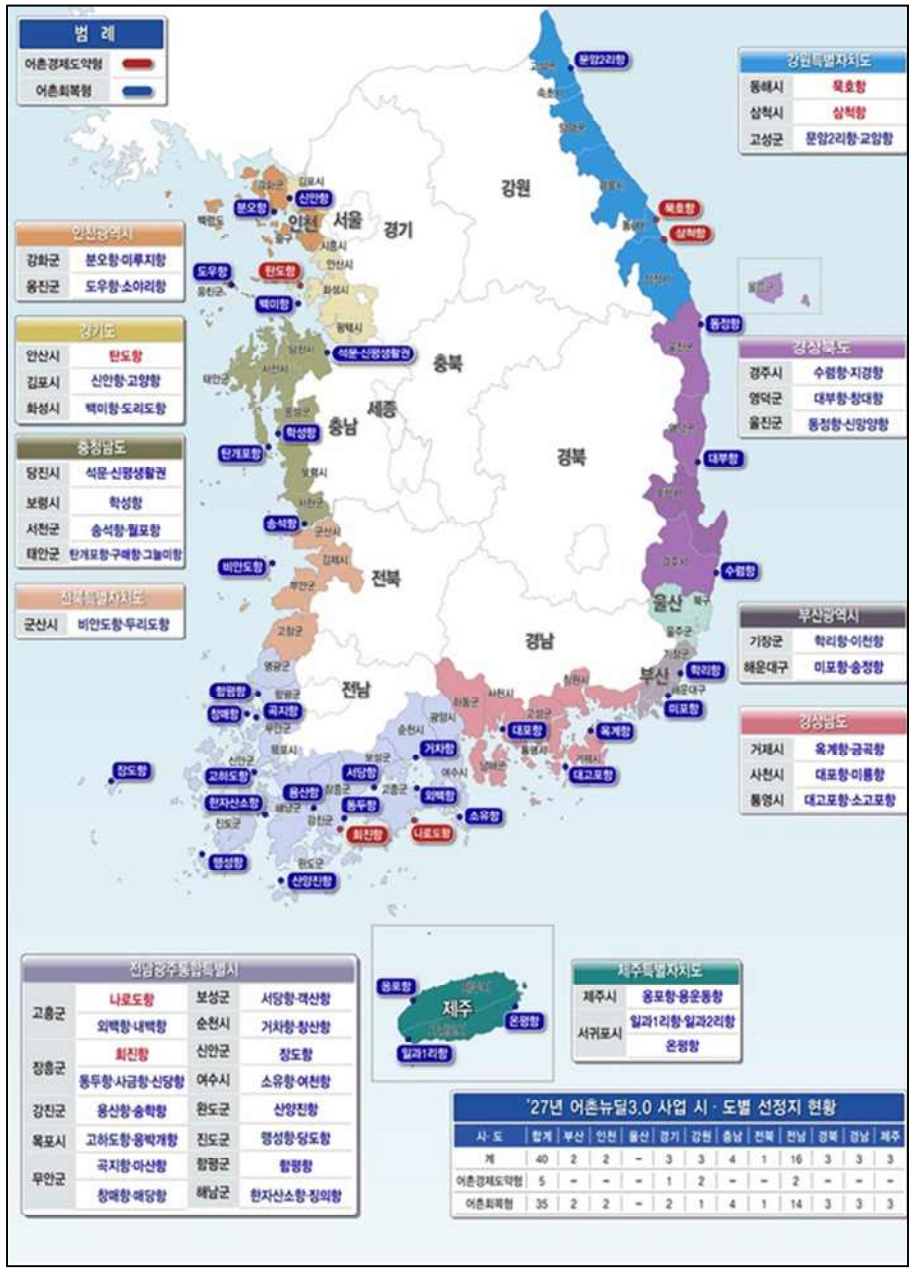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51-773-6170)
		담당자	사무관	황현태 (051-773-61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40개소)

구분	사업기간	선정 지역					
		시·도	시·군	대상지	시·도	시·군	대상지
어촌경제도약형 (총사업비 최대 300억 원 국비 150억 원 이내)	5년	경기	안산시	탄도항	전남	고흥군	나로도항
		강원	삼척시	삼척항		장흥군	회진항
			동해시	묵호항	총 5개소		
어촌회복형 (총사업비 최대 100억 원 국비 70억 원 이내)	4년	부산	기장군	학리·이천	전남	보성군	서당·객산
			해운대	미포·송정		순천시	거차·창산
		인천	강화군	분오·미루지		신안군	장도
			옹진군	도우·소야리		여수시	소유·여천
		경기	김포시	신안·고양		완도군	산양진
			화성시	백미·도리도		진도군	맹성·당도
		강원	고성군	문암2리·교암		함평군	함평
		충남	당진시	석문·신평		해남군	한자산소·징의
			보령시	학성	경북	경주시	수렴·지경
			서천군	송석·월포		영덕군	대부·창대
			태안군	탄개포구매그늘미		울진군	동정·신망양
		전북	군산시	비안도·두리도	경남	거제시	옥계·금곡
		전남	고흥군	외백·내백		사천시	대포·미룡
			장흥군	동두사금·신당		통영시	대고포·소고포
			강진군	용산·송학	제주	제주시	옹포·용운동
			목포시	고하도·응박개		서귀포시	일과1·2리
			무안군	곡지·마산			온평
				창매·매당	총 35개소		

참고 2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위치도



참고 3 사업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요약)

〈사업구조 개편 방안〉

□ (**개편방향**) **경제 거점**은 **민간투자**와 **지속 연계**하고 **생활 거점**은 조성·**활용 체계로 이원화**하며, **안전 인프라 구축 유형 신설** 추진

① (경제도약형 **경제거점**) **민간 자본과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

② (회복형Ⅰ **생활거점**)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촌으로 **서비스 전달 활성화**

③ (회복형Ⅱ **거점활용**) **거점 조성 생활권**의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토록 **지원**

④ (안전형 **안전확보**) **기후 위기** 및 **여객선 공영제**('27~) 대비 **인프라 확충 정비**

< 현 행 > 사업유형	< 개 편 > 사업유형	기능 및 대상	지원범위
어촌경제도약형 (최대 300억 원, **5년**)	어촌경제도약형 (최대 300억 원, **6년**)	경제 거점 (민간투자)	■ 지역 특성화 거점 시설 조성
어촌회복형 (최대 100억 원, **4년**)	어촌회복형Ⅰ (최대 100억 원, **5년**)	생활 거점 (신규 생활권)	■ 거점 시설 조성 ■ 배후 서비스 전달
	어촌회복형Ⅱ (최대 30억 원, 4년)	거점 활용 (기 준공 생활권)	■ 거점 활용도 제고 ■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신설)	어촌안전형 (최대 70억 원, 4년)	안전 확보 (안전 취약 생활권)	■ 도서 위주 ■ 안전·기반 정비

* 행정절차 이행(중앙재정 투자 심사, 기본계획 심의 등) 소요 기간 고려 사업 기간 1년 연장

〈사업 내실화 방안〉

□ (**선정**) **공모 선정**의 **실효성 제고** 및 **평가 공정성 확보**

○ 국비 **실 집행률 미달** 지방정부의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어촌 뉴딜 사업 운영성과**를 **공모 평가에 적극 반영***, **수탁기관 출신 인사 배제**

* 시설물 운영관리 지속성' 평가 배점 상향(5→10점) 및 준공시설물 활용 실적 지표 신설

□ (**심의·시행**) **사업 계획**의 **내실화** 및 **시행 단계**의 **엄격한 집행 관리**

○ **사전심의**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부실 계획 차단, 미 발주 시 선정 취소 등 강력한 **Cut-off 시행** 및 **진단평가 실시**(사업비 5% 내외 증감)

□ (**사후관리**) **점검 체계 고도화**를 통한 **시설 운영**의 **실효성·책임성 제고**

○ **중요 재산·운영 현황 점검 체계 이원화** 및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유휴 시설물**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용도변경 허용**과 **엄격한 인수인계 절차** 및 **조례 기반의 책임 관리 체계 확립**